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제학 석사 학위논문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의 조세정책이  
소득불평등 개선에 미치는 영향

- 지니계수와 실업률을 중심으로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박성현

#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의 조세정책이 소득불평등 개선에 미치는 영향

- 지니계수와 실업률을 중심으로 -

지도 교수 김 영 식

이 논문을 경제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박 성 현

박 성 현의 경제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원장 장용성 (인)

부위원장 김영식 (인)

위원 이정민 (인)

## 초 록

본 연구는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의 정책효과를 경기변동지수인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과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니계수를 통해 분석하고 정리해본다. 본 연구에서는 지니계수를 세전, 세후로 분리하여 각각의 연도별 차이를 구한 뒤, 이를 정부의 조세 정책에 의한 소득불평등 개선도로 측정하여 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실업률이 올라갈수록 즉 경기가 악화될 때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정부의 조세정책을 통한 개입 전보다 개입 후가 더욱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률의 변동으로 살펴본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 경기 회복과 악화의 시점에 따라 개입 의도와는 다르게 소득불평등을 되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주요어 :** 경기변동, 소득불평등, 실업률, 지니계수, 근로자가구

**학 번 :** 2016-20148

## 목 차

1. 서 론 .....	1
2. 선행연구 .....	3
3. 연구방법 설계 .....	7
3.1 연구 모형 .....	7
3.2 정부 정책효과의 측정 .....	8
3.3 경기변동지수 .....	12
3.4 통제변수 (경상조세 실무담률) .....	14
4. 실증분석 결과 .....	18
5. 결 론 .....	20
참고문헌 .....	22
Abstract.....	24

## 표 목차

[표2-1] .....	4
[표2-2] .....	5
[표3-1] .....	8
[표3-2] .....	10
[표3-3] .....	13
[표3-4] .....	17

## 그림 목차

[그림3-1] .....	11
[그림3-2] .....	11
[그림3-3] .....	12

# 1. 서 론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 소득재분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맞게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시행, 조세 제도의 재정비, 사회보장지출의 확대 등 이른바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들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여 구간별 세율을 달리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조세를 활용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였으나 최근 들어 소득재분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관심도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이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이는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내 데이터가 제한적인 것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들어 국세청의 조세통계포털에서는 조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세목별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나 세목별 추세를 알아보거나 각 세목별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디지털화된 각 연도별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기변동과 관련된 지표들과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려 한다. 소득불평등 지표로서는 근로자가구의 세전, 세후 지니계수를 구하고 이 차이를 계산한 소득불평등 개선도를 도출하였다. 경기변동지표로는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을 선정하였고 모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대변해줄 수 있는 소득 규모별 경상조세 실무담률을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소득불평등을 다루는 기초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도시거주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소득

10분위별 가계수지 자료를 통해 계산하였으며 기존 경기변동지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소비자물가조사』,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충분한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는데 집중하였으며 가계동향조사는 해당 기간의 도시거주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자료가 충분히 계정별로 나와있어 분석에 매우 용이하였다.

본고의 주요 분석결과에서는 경기변동지수인 실업률이 올라갈 때, 즉 경기가 악화되어갈 때 정부의 조세정책에 의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는 되려 음(-)의 성장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며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왔기에 통제변수로 투입된 고소득층(5분위)의 세금부담이 올라갈수록 정부의 정책효과는 양(+)의 성장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모형의 설명력을 높여주었다.

본고는 기존 연구들이 소득불평등도의 측정을 위해 추산된 지니계수, 엡킨슨지수, suits 지수 등을 기반으로 경기변동과 소득불평등에 대해 설명하려 한데 반해, 본 연구는 소득 5분위별 경상소득 기준의 세전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별 처분가능소득 기준 세후 지니계수의 차이를 계산하여 소득불평등 개선도를 구해서 경기변동과 소득불평등 개선에 대한 정부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어지는 제 2절에서는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제 3절에서는 연구 방법론을 설명하고 제 4절에서는 연구 방법론을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고 제 5절에서는 제 4절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 2. 선행연구

우리나라는 정부의 누진적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연구에 비해 경기 변동 지수에 따른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배준호·홍충기(1997)는 소득세 등 직접세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수입, 지출, 각 납세자 비율, 세부담률을 비교하였다. 수입부분에서는 도시 자영업자가 도시 근로자가구에 비해 평균 소득은 23%<sup>1</sup> 더 높았고 지출은 8%더 많았다. 또한 납세자 비율은 전체 인구중 88.9%였으나 근로자가구 중 91.2%가 자영업자 중에는 83.2%가 납세자 비율이었다. 세부담에서 소득세 등의 부담율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230% 더 높은 세부담을 하였고 고소득층에서는 400% 더 높은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자영업자가 근로자가구에 비하여 더 높은 조세 납부의 회피율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성명재(2016)에서는 근로·종합소득세를 대상으로 소득공제와 연계하여 세부담의 누진도와 소득 재분배효과 사이에 역U자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충분히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회귀분석을 통해 근로·종합소득세의 누진도는 소득재분배 효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GDP 대비) 근로·종합소득세의 세수비중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명재(2016)에서는 소득공제에 대한 분석 또한 실시하였는데 세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세부담의 누진도를 높여 세금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는데 효과적이었으나, 세수 감소를 통해

---

<sup>1</sup> 면세자를 포함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화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냈다. 현행 소득세제는 후자의 효과가 전자를 압도하면서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가 오히려 감소함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반대의 경우에 소득공제의 축소는 누진도를 완화시키지만 세수증가 효과가 이를 압도하면서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연희·이희선(2010)에서는 1975년부터 2006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4가지 요인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4가지는 경제요인, 노동사회요인, 조세부담, 사회복지비지출로 구성되는데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은 단일 차원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이 네가지 요인들 간의 결합 및 경로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 4권 p.249-251(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1996년 이후 4단계의 세율구간을 유지하다가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 요구로 인하여 2012년 과표 3억원 초과구간을 새롭게 설정하여 5단계의 세율구간으로 변경되었다가 2014년 최고세율 구간 확대 및 2017년 추가로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함으로써 6단계의 세율구간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 3억원 구간을 신설하면서 7단계의 과세표준구간으로 변경되었으며, 2021년 10억원 구간을 신설하여 8단계의 과세표준구간으로 변경되었다.

[표 2-1]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8단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분×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 초과분×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 초과분×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50만원+1억5,000만원 초과분×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3억원 초과분×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60만원+5억원 초과분×42%
10억원 초과	3억8,460만원+10억원 초과분×45%

출처 : 국세청

[표2-2] 2008~2021년 소득세율과 과세표준구간 변화]

2008년(4 단계)		2009년(4 단계)		2010년(4 단계)	
과세표준구간	세율 (%)	과세표준구간	세율 (%)	과세표준구간	세율 (%)
1,200 만원 이하	8	1,200 만원 이하	6	1,200 만원 이하	6
4,600 만원 이하	17	4,600 만원 이하	16	4,600 만원 이하	15
8,800 만원 이하	26	8,800 만원 이하	25	8,800 만원 이하	24
8,800 만원 초과	35	8,800 만원 초과	35	8,800 만원 초과	35
2012년(5 단계)		2014년(5 단계)		2017년(6 단계)	
과세표준구간	세율 (%)	과세표준구간	세율 (%)	과세표준구간	세율 (%)
1,200 만원 이하	6	1,200 만원 이하	6	1,200 만원 이하	5
4,600 만원 이하	15	4,600 만원 이하	15	4,600 만원 이하	15
8,800 만원 이하	24	8,800 만원 이하	24	8,800 만원 이하	24
3 억원 이하	35	1.5 억원 이하	35	1.5 억원 이하	35
3 억원 초과	38	1.5 억원 초과	38	5 억원 이하	38
				5 억원 초과	40
2018년(7 단계)		2021년(8 단계)			
과세표준구간	세율 (%)	과세표준구간	세율 (%)		
1,200 만원 이하	6	1,200 만원 이하	6		
4,600 만원 이하	15	4,600 만원 이하	15		
8,800 만원 이하	24	8,800 만원 이하	24		
1.5 억원 이하	35	1.5 억원 이하	35		
3 억원 이하	38	3 억원 이하	38		
5 억원 이하	40	5 억원 이하	40		
5 억원 초과	42	10 억원 이하	42		
		10 억원 초과	45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발간 “2021국정감사 이슈 분석 4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중석·오종현(2019)은 복지사업 확충 및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지출 확대에 대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사태로 인해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중석(2015) 소득세 세수입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소득세 과세체계를 조정하여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전병목(2017), 김재진(2016)에서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면세자가 많은 것도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의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면세자 축소를 위하여 소득세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소득세 제도의 변화와 다양한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 시기 적절하게 알맞은 정책을 펴기 위해 경기변동과 소득재분배에 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았다.

Simon C. Parker(1999)의 연구에서 인플레이션은 고소득층의 희생을 통한 중산층의 소득 증가로 인해 함께 소득 불평등을 조정하지만 실업률은 소득분배에 되려 역진적인(regressive effect)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곽노선(2018)의 연구에서는 소득분배구조의 추세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소득분배의 변화 또한 중요한 정책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경기확장기에는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경기침체기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을 분석하였고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바 있다.

### 3. 연구방법 설계

#### 3.1 연구 모형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의 정책효과를 실증분석 해보고자 함이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 소득불평등에 대한 지니계수의 도출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활용한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서 도시거주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자료는 장기간의 시계열 데이터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득 분위에 따른 가계수지 자료가 나와있어서 지니계수를 도출하고 소득 분위별 경상조세 실부담률을 도출하는데 용이하여 해당 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단순히 계산된 지니계수나 엡킨슨 지수, suits 지수 등의 소득불평등관련 지수와 전체 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하여 설명하려 한데 반하여 본고에서는 세금부과 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지니계수와 세금이 부과된 이후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지니계수의 차이를 구하여 소득불평등 개선도 즉, 정부의 정책효과를 측정하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로서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평등한 값을 가지는 계수이다. 따라서 정부의 조세 정책을 통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불평등 개선도와 경제변동지표로 볼 수 있는 실업률,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과 통제변수로는 각 소득 분위별 경상조세 실부담률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y_t = \beta_0 + \beta_1 UNEM_t + \beta_2 CPI_t + \beta_3 REGROWTH_t + \beta_3 quintile_1_t + \beta_4 quintile_2_t + \beta_5 quintile_3_t + \beta_6 quintile_4_t + \beta_7 quintile_5_t + \varepsilon_t \quad (1)$$

여기에서  $y_t$ 는 종속변수로 총 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한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불평등 개선도이다. 독립변수로는 경제변동지표로  $UNEM_t$ 은 t연도의 경제 전체의 실업률,  $CPI_t$ 는 t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REGROWTH_t$ 는 t연도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선정하였다. 통제변수로  $quintile\_1_t \sim quintile\_5_t$ 는 t연도의 도시거주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5분위 소득 중 각 분위별 경상조세 일부담률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표3-1] 변수 표

구분	변수명	정의	자료출처
지니계수	GINI_BFTAX (총소득)	$G = \sum_i \sum_j \frac{ Y_i - Y_j }{2N^2\mu} P_i \cdot P_j$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10분위별 도시 근로자 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의
	GINI_AFTAX (처분가능소득)	$G' = \sum_i \sum_j \frac{ Y'_i - Y'_j }{2N^2\mu'} P'_i \cdot P'_j$	
종속변수	GINI_dff	$GINI\_dff = G - G'$	경상조세액과 총소득, 처분가능소득을 통해 각 정의에 따라 산출
독립변수	UNEM (실업률)	$\frac{\text{실업자의 수}}{\text{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CPI (인플레이션율)	$\frac{\text{당해년도 CPI} - \text{전년도 CPI}}{\text{전년도 CPI}}$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REGROWTH (경제성장률)	$[(\text{금년도 실질GDP} - \text{전년도 실질GDP}) \div \text{전년도 실질GDP}] \times 100$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제변수	quintile_1~5	$\frac{\text{각 분위별 경상조세}}{\text{각 분위별 총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10분위별 도시 근로자 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의 경상조세액과 총소득, 처분가능소득을 통해 각 정의에 따라 산출

### 3.2 정부 정책효과 측정

본고에서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에 이르는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의 소득구간별 과세정책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개선도에 대한 정부정책효과 결정요인을 조세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개선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근로자가구만을 포함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표본의 크기 또한 3,000여 가구에서 최대 7,200가구 수준으로 모집단의 실제 가계수지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단일 기관에서 근로자가구에 대해서 소득 분위별 가계수지를 알 수 있는 자료 중 가장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며, 근로자가구의 소득 분위별 근로소득세 부담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상조세와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구에 대한 정부의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도시거주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세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도출한 지니계수(GINI\_BFTAX)와 세후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도출한 지니계수(GINI\_AFTAX)를 바탕으로 계산한 소득불평등 개선도(GINI\_dff)를 [표 3-4]에 표기하였다. 추후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세전 지니계수에서 세후 지니계수를 빼서 개선도를 양(+)-값으로 나타내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연구하는 논문에서 주로 많이 쓰인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소득불평등 지수를 살펴보면 1997년말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악화되어 이후에는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지니계수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98년과 2000년과 2001년에는 소득불평등 개선도로 보여지는 정부의 정책효과가 되려 역행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서 2019년까지 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가 전체적으로 0.3 이하를 유지함으로써 대체로 근로자가구 간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주성환·정영화(2010)에서 1990년에서 2003년까지 계산한 지니계수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소득분배지표(1990~2016)에서 공개된 지니계수의 추이 결과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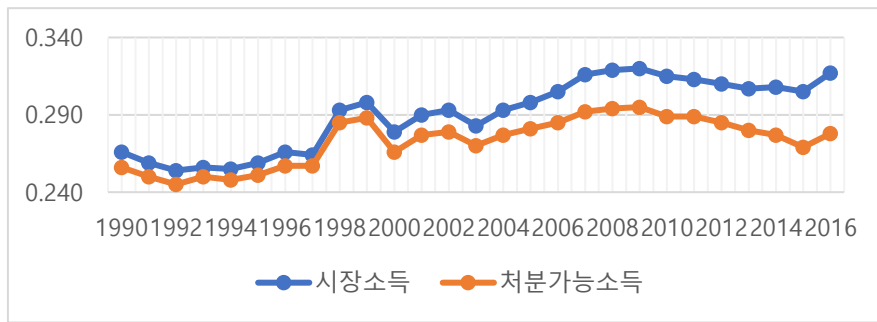
세전/후 지니계수의 차이를 활용해 도출한 소득불평등 개선도에서는 정부의 조세정책 효과를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1997년 말경에 발발한 IMF사태로 2001년 8월 IMF 부채 상환을 완료시기까지 정부정책효과는 역효과를 기록하며 되려 소득의 재분배를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때에 일제히 지니계수가 상승하며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세전/후 지니계수와 소득불평등 개선도(1990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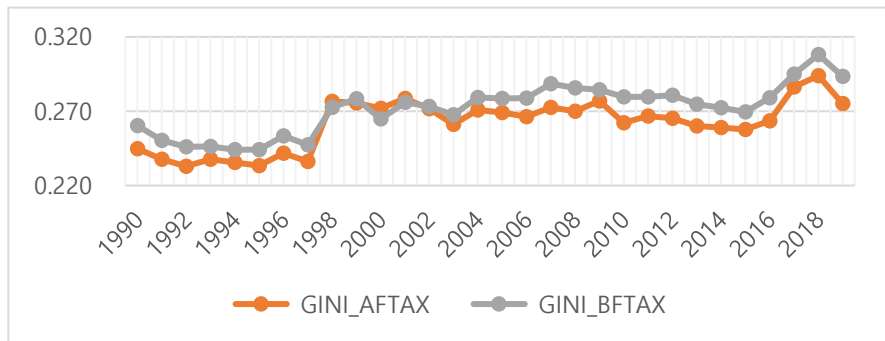
연도	GINI_AFTAX	GINI_BFTAX	GINI_dff
1990	0.2449	0.2604	0.0155
1991	0.2378	0.2503	0.0126
1992	0.2330	0.2460	0.0131
1993	0.2376	0.2464	0.0087
1994	0.2355	0.2441	0.0086
1995	0.2334	0.2442	0.0108
1996	0.2417	0.2534	0.0116
1997	0.2361	0.2473	0.0112
1998	0.2766	0.2726	-0.0039
1999	0.2757	0.2783	0.0026
2000	0.2719	0.2649	-0.0070
2001	0.2787	0.2761	-0.0026
2002	0.2718	0.2732	0.0015
2003	0.2612	0.2677	0.0065
2004	0.2708	0.2792	0.0085
2005	0.2692	0.2786	0.0094
2006	0.2664	0.2788	0.0125
2007	0.2727	0.2885	0.0159

2008	0.2699	0.2858	0.0158
2009	0.2769	0.2844	0.0074
2010	0.2622	0.2797	0.0175
2011	0.2667	0.2797	0.0131
2012	0.2653	0.2808	0.0155
2013	0.2601	0.2748	0.0146
2014	0.2591	0.2723	0.0132
2015	0.2577	0.2695	0.0117
2016	0.2636	0.2790	0.0154
2017	0.2863	0.2949	0.0085
2018	0.2939	0.3080	0.0142
2019	0.2752	0.2935	0.0183

[그림3-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 (1990년~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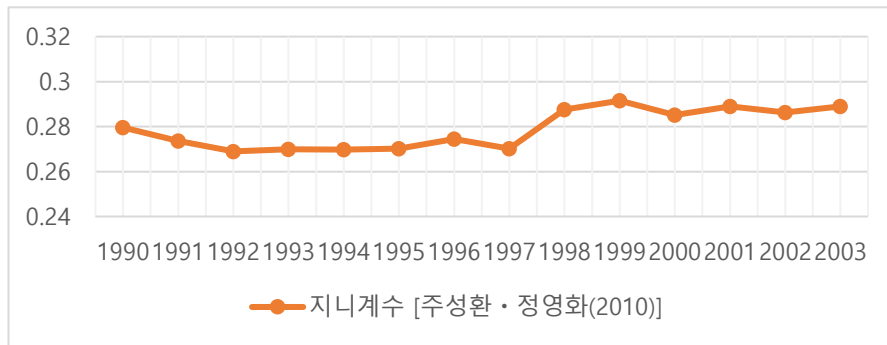


[그림3-2] 본 연구 도출 지니계수 추이 (1990년~2019년)





[그림3-3] 주성환·정영화(2010) 도출 지니계수 추이



(1990년~2003년)

### 3.3 경기변동지수

본고의 연구 목적은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의 정책효과를 실증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경기변동지수를 선정해야했다.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연구한 논문인 김연희·이희선(2010)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의 결정 요인은 경제요인, 노동사회요인, 조세제도, 복지정책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환경요인들 간의 결합 및 경로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이중 경제요인은 Kuznets(1955)의 이론 연구로 한국의 경제성장과 같은 경제적 환경이 소득불평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연구된 바 있으며, 노동 사회적 요인은 노동시장분절론, 신구조주의계층론, 마르크시스트 계급이론 등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제도로서는 막대한 양의 경제적 자원을 조세 등의 수단에 의해 흡수하고 각종의 지출항목을 통해 다시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 소득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Hinrichs(1966), Musgrave(1969), 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은 사회 복지비 지출을 통해 빈곤층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거나 교육, 의료서비스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연구된 논문들을 참고하여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요소들 중 경기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선택하였다. 안국신 외(1995)는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률, 실업률을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으로 분석하여 경제성장률은 소득분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실업률은 양(+)의 효과를, 인플레이션률은 음(-)의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또한 Nolan(1990)에 따르면 실업률은 최하위층에 음(-)의 영향을 미쳐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은 뚜렷한 영향을 갖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의 소득불평등 결정 요인을 참고하고 기존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의 정책효과가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보기위해 소비자물가상승율, 실업률, 경제성장률을 경기변동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은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실업률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국민계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수에 포함하였다. 해당 경기변동지수를 조사하여 [표 3-3]에 표기하였다.

[표 3-3] 연도별 실업율과 소비자물가상승율(1990년~2019년)

연도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율	경제성장률
1990	2.40%	9.90%	9.90%
1991	2.40%	10.80%	10.80%
1992	2.50%	6.20%	6.20%
1993	2.90%	6.90%	6.90%
1994	2.50%	9.30%	9.30%
1995	2.10%	9.60%	9.60%
1996	2.00%	7.90%	7.90%
1997	2.60%	6.20%	6.20%
1998	7.00%	-5.10%	-5.10%

1999	6.30%	11.50%	11.50%
2000	4.40%	9.10%	9.10%
2001	4.00%	4.90%	4.90%
2002	3.30%	7.70%	7.70%
2003	3.60%	3.10%	3.10%
2004	3.70%	5.20%	5.20%
2005	3.70%	4.30%	4.30%
2006	3.50%	5.30%	5.30%
2007	3.20%	5.80%	5.80%
2008	3.20%	3.00%	3.00%
2009	3.60%	0.80%	0.80%
2010	3.70%	6.80%	6.80%
2011	3.40%	3.70%	3.70%
2012	3.20%	2.40%	2.40%
2013	3.10%	3.20%	3.20%
2014	3.50%	3.20%	3.20%
2015	3.60%	2.80%	2.80%
2016	3.70%	2.90%	2.90%
2017	3.70%	3.20%	3.20%
2018	3.80%	2.90%	2.90%
2019	3.80%	2.20%	2.20%

### 3.4 통제변수 (경상조세 실부담률)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통제변수를 추가하였다. 통제변수에 경상조세 실부담률을 사용한 이유는 선행연구에 조세제도의 소득불평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변수라 생각하여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본고에서는 보다 정교한 통제변수를 만들기 위하여 데이터는 근로자가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10분위별 도시 근로자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유리 지갑’ 이라 불릴 정도로 세금의 납세여부가 원천징수로 매우 명확하고 자영업자에 비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배준호·홍충기(1997)의 연구 결과 수입부분에서는 도시 자영업자가 도시 근로자가구에 비해 평균 소득은 23% 더 높았고 지출은 8%더 많았다. 그런데 세부담에서 소득세 등의 부담율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230% 더 높은 세부담을 하였고 고소득층에서는 400% 더 높은 세부담을 보이고 있다고 연구하였다. 전해정(2014)의 가구 소득의 소득불평등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가구 소득불평등에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세율을 인상하며 세원 포착을 좀 더 정부당국이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 연구결과를 볼 때에 소득불평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부의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누진적 조세제도는 정부의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으로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Shigehiro Oishi, Kostadin Kushlev and Ulrich Schimmack(2018) 에서는 미국의 1962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 소득세가 누진적일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Richard krever, Hui Zhang(2011)에서는 중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를 측정하고 도시와 교외 지역의 소득 불평등도를 바탕으로 조세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연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수입<sup>2</sup>은 2020년 기준으로 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35.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23.40%),

---

<sup>2</sup> 국세통계포털(TASIS) 2-1-2 연도별 세목별 세수실적

법인세(20.01%)로 세가지 세수입이 전체 세수의 78.83%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크게 원천분과 신고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원천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고용주들에 의해 세무신고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과소평가될 위험이 매우 적다. 그러나 신고분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으로 이뤄지는데 과소신고를 통한 탈세로 인해 정확한 세수를 파악하기 힘들다.

조세는 원천분과 신고분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 부과되는 직접세인 경상조세(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와 비경상조세(양도소득세, 부동산취등록세 등)로 분류하기도 한다. 일명 ‘유리지갑’ 이라고 불릴 만큼 비교적 투명하게 측정이 용이한 근로소득세는 경상조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도별 10분위 소득분위별 근로소득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하려 하였으나 데이터를 집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추정하고자 하였으나 본고에서 활용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근로소득세가 경상조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득 분위별 경상조세 실부담률로 이를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본고에서는 경상조세를 총소득으로 나누어 경상조세 실부담률을 계산하였으며 이는 [표 3-8]에 표기하였다. 경상조세의 실부담률은 저소득층으로 대표되는 1분위에서는 1990년에서 2019년까지 세부담이 1%정도 증가하였으나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5분위에서는 3.65%증가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고소득층에 세부담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3-4] 소득 분위별 경상조세 실부담률(1990년~2019년)

연도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1990	0.71%	0.94%	1.40%	2.46%	4.93%
1991	0.59%	0.91%	1.27%	2.02%	3.91%
1992	0.59%	1.06%	1.69%	2.84%	4.53%
1993	0.89%	1.37%	1.85%	2.63%	4.28%
1994	0.97%	1.45%	1.96%	3.03%	4.50%
1995	1.02%	1.48%	2.32%	3.31%	4.99%
1996	0.96%	1.62%	2.47%	3.33%	5.22%
1997	1.13%	1.63%	2.16%	3.22%	4.74%
1998	1.20%	1.80%	2.51%	3.64%	5.13%
1999	1.04%	1.57%	2.05%	3.05%	4.97%
2000	0.97%	1.66%	2.21%	3.25%	4.86%
2001	0.81%	1.36%	2.36%	3.36%	5.22%
2002	0.68%	1.30%	2.01%	3.01%	4.95%
2003	0.86%	1.50%	2.00%	3.14%	4.65%
2004	0.90%	1.32%	2.00%	3.22%	4.98%
2005	0.78%	1.20%	1.95%	3.16%	5.00%
2006	0.79%	1.21%	2.11%	3.48%	5.49%
2007	0.79%	1.33%	2.22%	3.43%	5.98%
2008	0.92%	1.47%	2.15%	3.70%	6.03%
2009	1.06%	1.40%	2.20%	3.37%	5.23%
2010	1.15%	1.57%	2.21%	3.33%	5.95%
2011	1.32%	1.69%	2.42%	3.52%	5.96%
2012	1.33%	1.70%	2.41%	3.42%	6.23%
2013	1.43%	1.69%	2.54%	3.47%	6.02%
2014	1.49%	1.92%	2.59%	3.63%	6.00%
2015	1.49%	2.06%	2.66%	3.58%	6.02%
2016	1.36%	1.98%	2.82%	3.64%	6.42%
2017	1.68%	2.31%	2.95%	3.96%	5.96%
2018	1.58%	2.50%	3.41%	4.46%	8.44%
2019	1.71%	2.60%	3.90%	4.76%	8.58%

## 4. 실증분석 결과

본고의 연구 목적인 소득불평등 개선도(정부정책효과)에 각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계량모형 (1) 식을 근거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4-1]과 같다.

[표 4-1] 소득불평등 개선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소득불평등 개선도
소득 1분위 경상조세 실부담률		1.312252
소득 2분위 경상조세 실부담률		-0.6406005
소득 3분위 경상조세 실부담률		-1.068946
소득 4분위 경상조세 실부담률		-0.0430202
소득 5분위 경상조세 실부담률		0.7028945***
실업률		-0.3318524***
소비자물가상승률		0.0025435
경제성장률		-0.012536
R-squared		0.7707
Adj R-squared		0.6833
D-W stat		
F-statistic		8.82

주) \*, \*\*, \*\*\*는 각각 10%, 5%, 1%이내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다

회귀모형에서 잔차의 자기상관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test를 하였고 그 값이 1.592513로 비교적 2에 가까운 값이므로 자기상관이 없거나 매우 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Durbin's alternative test, Breusch-Godfrey LM test도 실시하였으나 모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statistics 또한 1%이내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얻었다.

본 실증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 효과로 볼 수 있는 소득불평등 개선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고에서 설정한 경기변동지수인 실업률과 통제변수인 소득 5분위 고소득층의 경상조세 실부담률이다. 실업률은 1%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본 연구의 검증 대상인 소득 5분위(고소득층)의 경상조세 실부담률은 1%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고소득층에 가해지는 경상조세 실부담률이 올라갈수록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어 정부정책효과가 나타나며 경기변동(실업률)이 올라갈수록 소득불평등의 정부 정책효과가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인 경상조세 실부담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세율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득 5분위의 유의미한 통계 결과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경기변동(실업률)에 따른 정부정책 효과의 역효과(regressive effect)는 기존 연구들과 본고가 갖는 차별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던 경기변동(실업률)에 정부의 조세 정책 효과는 경기가 회복될 때에는 효과가 있고 경기가 침체 구간에 들어갈 때에 정부의 조세 정책 효과는 되려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 5. 결 론

본고에서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정책이 과연 시기 적절했을까?’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지니계수로 분석해보았다. 기존 연구들이 소득분배지표의 추세를 파악하거나 소득 분위별 또는 연령별, 학력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는 소득 분위별 실부담세율을 통제변수로 두고 경기변동 요인에 의한 정부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추세적 분석에 머무르고 있기에 본고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

본고의 결과는 실업률 증가로 대표되는 경기가 악화될 때 정부의 조세 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는 정부의 개입이 있기 전보다 악화되고 실업률의 감소로 알 수 있는 경기 회복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개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imon C. Parker (1999)의 연구에서 인플레이션은 고소득층의 희생을 통한 중산층의 소득 증가로 인해 함께 소득 불평등을 조정하지만 실업률은 소득분배에 되려 역진적인(regressive effect) 효과를 가진다고 한 것과 특히 광노선(2018)의 연구결과 중 경기 확장기에는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경기침체기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2014년부터 지속적인 부자증세로 최고세율 및 고소득 구간의 변동이 있었다. 특별히 고소득층에 대하여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세분화, 최고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났다. 2014년에는 5단계의 과세표준구간과 6~38%까지의 세율구조로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5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여 부자 증세를 시작하였다. 2018년에는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까지 올리면서 강화하였고, 이는 7단계의 과세표준구간과 6~42%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으며 최고 세율은 45%로 인상하여 현재 8단계의 과세표준구간과 6~4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지속적인 누진적 조세 제도는 기존 연구와 정책들이 소득분배구조의 추세적 변화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소득분배구조의 추세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정책을 펴는데 경기변동 또한 중요한 고려대상이라고 볼 수 있게 되었다.

거시경제정책으로서 추세를 분석하고 경기 변동에 대해 경기안정화 정책이 있듯이 최근 정부에서 관심있게 전개하고 있는 소득분배 정책에도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본고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소득불평등 개선에 대하여 경기변동지수를 통해 정부의 정책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 실증분석을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들이 단순 지니계수와 연구 변수간의 인과관계의 파악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하여 지니계수를 세전, 세후로 나누어 계산하고 그 차이를 도출하여 정부정책효과를 검증하려 하였다는 점에서도 다른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그러나 본고는 한계점도 갖는데 경기변동지수 중 실업률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경기 변동 변수들에 대하여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실증분석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이론에 의한 분석과 해석이 부족하다는 점, 우리나라에 국한된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 분석 대상이 도시거주 2인이상 근로자가구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이 본고에서 갖는 한계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모형을 구축하여 정부의 정책 효과 및 개선점을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다.

## 참고문헌

- 안국신(1995), “우리나라 계층별 소득분배의 결정요인분석”, 한국계량경제학회
- 안국신(1995), “한국의 경제발전과 소득분배”, 한국경제발전학회
- 배준호·홍충기(1997),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분포”
- 김연희·이희선(2010), “한국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주성환·정영화(2010),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상경연구 [제35권 제1호, 2010], pp. 121-152
- 전해정(2014), “부동산소득이 지역별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
- 안종석(2015),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재정포럼』  
제234호
- 강상엽 기자(2016), 한경 뉴스 조세일보 『지난해 '가계 세부담'  
늘었다...'경상조세' 전년比 2.0% ↑』
- 성명재(2016),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 김재진(2016), 「연말정산 대란과 보완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들」,  
『재정포럼』 제24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병목(2017),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안종석(2017),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평가와 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 BRIEF 통권 제59호]
- 국회예산정책처(2018),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 안중석·오종현(2019),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향 연구」, 『재정포럼』 제275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5. 15.
- 임언선(2021),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국회입법조사처발간 “2021국정감사 이슈 분석 4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pp. 249-251
- Kuznets, S. (1951), National Income. Homewood: Richard D. Irwin.
- Kuznets(1955),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XLV
- Hinrichs, Harley H. (1966), A General Theory of Tax Structure Change During Economic Development. Law School of Harvard University.
- Musgrave, R. A. (1969), Fiscal Systems. Yale University Press.
- Simon C. Parker (1999), Income Inequality and The Business Cycle: A Survey of The Evidence and Some New Results
- Richard Krever, Hui Zhng(2011), Progressive Income Taxation and Urban Individual Income Inequality
- Shigehiro Oishi, Kostadin Kushlev and Ulrich Schimmack(2018), Progressive Taxation, Income Inequality, and Happiness

## Abstract

# Government tax policy effect according to economic fluctuation on income inequality improvement (by gini coefficient and unemployment rate)

Seong Hyeon, Park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and summarizes the government's progressive tax policy effects on income inequality which can measure by the Gini coefficient through economic indexes (unemployment rate, inflation rate, economic growth rate).

In this study, the Gini coefficient was separated into pre-tax and post-tax categories to find the difference for each year, and this was measured as the improvement in income inequality by the government's tax policy, and this was used as an analysis target. The result of the main analysis, the unemployment rate rises, that is, when the economy deteriorates,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is worse after the intervention than before the intervention through the government's tax policy. This can be summarized that government's intervention in response to economic fluctuations, which was examined by fluctuations in the unemployment rate, could lead to aggravating income inequality differently from the intention of the

intervention, depending on the timing of economic recovery and deterioration.

**Keywords : Economic fluctuation, Income inequality, Unemployment,  
Gini coefficient, Worker household**

**Student Number : 2016–20148**